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광주 6/12℃ 목포 5/9℃ 여수 6/11℃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615호 1판 2010년 3월 5일 금요일
단기 4343년 (음력 1월 20일)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제 2의 창학원년, 출발 2010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박광태·강운태·전갑길 "시민이 뽑아야"
정동채·양형일·이용섭 "배심원제 해야"

민주 광주시장 후보 경선 방식 이견 팽팽
전남지사는 '여론조사' vs '도민+당원투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6명 중 여론조사 선두그룹인 강운태 의원· 박광태 시장 등 3명이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남지사 입지자 가운데 주승용 의원·이석형 예비후보 등 2명은 여론조사가 아닌 도민·당원 투표 방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관련 기사 3·4·5면〉

민주당의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 경선 방식 결정을 앞두고 4일 광주일보가 9명의 시장·지사 입지자들에게 물은 결과다. 견해 차가 워낙 커서 중앙당이 일방적으로 경선방식을 정할 경우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장 후보＝박광태 광주시장과 민주당 강운태 국회의원, 전갑길 예비후보는 광주시민과 당원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참여를 위해서는 국민참여경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시민과 당원이 있는데도 외부 사람이 들어와 광주시장을 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시민과 당원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의원도 "시민배심원 일부도 시민이지만, 적은 숫자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없다"면서 "당원,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완전 국민참여경선이 좋다"고 밝혔다.

전갑길 예비후보도 "경선은 대규모 축제 분위기로 치러져야 한다. 시민과 당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참여경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용섭 의원과 양형일·정동채 예비후보는 각 후보들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민배심원제도가 올바른 경선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좋은 시장 후보를 뽑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후보들을 검증하는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형일 예비후보는 "시민배심원제도와 당원·시민 여론조사가 경선방식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채 후보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시민배심원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다만, 당 기여도·정체성· 도덕성· 미래비전에 대한 확실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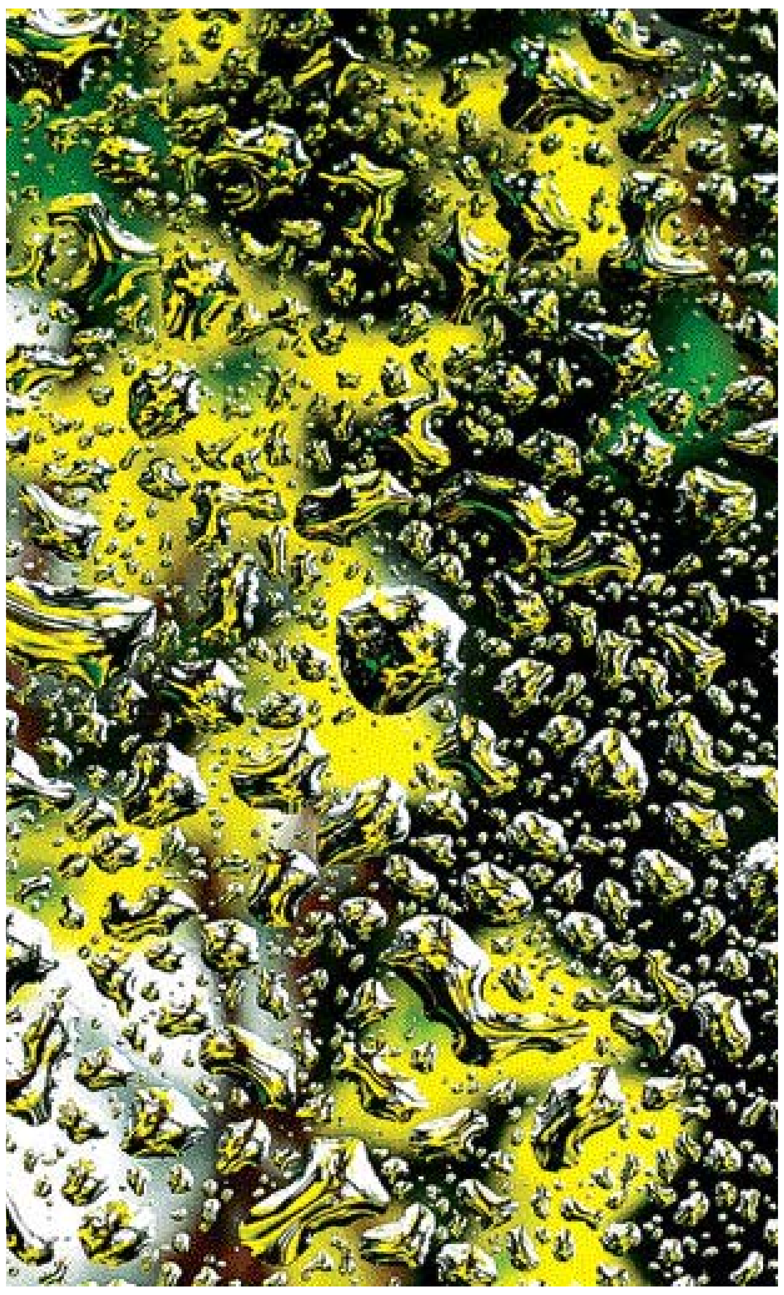
◇전남도지사 후보＝민주당 전남도지사 입지자 3명 중 박준영 전남도지사만이 도민여론조사를, 주승용 의원과 이석형 예비후보는 '도민＋당원 직접 투표'로 후보를 선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당원 직접 투표 방식, 이른바 체육관 경선은 폐해가 많다"며 "도지사 후보 경선은 여론조사만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승용 의원과 이석형 예비후보는 "여론조사는 현직에 특혜를 주는 꼴이기 때문에 경선방식에서 여론조사 비율을 줄이고, 도민과 당원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정견발표를 들은 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선날짜에 대해서도 "중앙당이 정한 대로 3월28일에 경선을 하면 후보 공모 후 3주밖에 시간이 없어 주민들이 후보를 파악할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면서 "4월10일 이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봄비의 추상 추적 추적 내리는 봄비와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 개나리꽃이 자동차 유리창에서 만나 한 폭의 추상화를 연출했다. 사진은 경칩을 이틀 앞둔 4일 오후 광주시 북구 두암동 주택가의 차안에서 바라 본 바깥 풍경.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화갑 내주 소환
檢, '공천헌금' 조사키로
최인기의원 어제 재조사

민주당 '공천헌금'을 수사중인〈본보 1월30일자 보도〉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4일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었던 최인기 국회의원을 재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날 최의원을 상대로 이미 구속된 박모 전 도의원에게 공천 당시 특별 당비 등을 권유했는지 여부와 '공천헌금'이 전달된 경로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8일에도 최의원을 소환조사 했으며, 당시 민주당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유모씨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다음주께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한화갑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애초 검찰은 이날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한 전 대표 측이 "다음주께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조사가 미뤄졌다. 검찰은 당시 당 대표였던 한 전 대표가 양모 도의원에게 특별당비 3억원을 내도록 한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2006년 당시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박모 전 도의원과 양모 도의원을 지난 1월 19일 구속했으며, 이중 양 의원은 금보석으로 풀려났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ja@

4월 3·4·11일 민주 광주 구청장 경선
동·서·광산구 '국민참여', 남·북구는 '시민배심원제' 유력

민주당 광주지역 구청장 경선은 4월 3~4일, 11일께 시민배심원제 또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시의원·구의원은 당원 경선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김동철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4일 오전 광주시당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천심사위 구성과 향후 공천 방식 결정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관련 기사 3면〉

현재 유력하게 고려되고 있는 경선방식은 구청장의 경우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광주 남구청장과 북구청장 경선은 시민배심원제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일자는 4월 3, 4, 11일이며 하루에 1~2개 구청장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국민참여경선의 선거인단 규모는 일반시민과 당원을 포함해 1천 명~2천 명· 비율은 50대 50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사정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 후보가 난립한 지역의 경우 공심위 심사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후보자를 압축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압축 방법은 공심위에서 결정키로 했다.

시·구의원 후보 선정은 당원경선으로 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외부인사 6명을 포함, 총 15명으로 구성된 6·2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심사위(이하 공심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공천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공심위는 5일 제1차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공천 방식과 일정을 논의키로 했으며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최종 확정키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한우 친환경축산물 인증 표시제
전남도 오늘부터 전국 첫 시행

국내 최초로 친환경 한우임을 보증하는 품질 인증제도가 전남에서 시행된다.

전남도는 "5일부터 일반 축산물과 차별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한우에 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인증마크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친환경축산물 인증 마크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획득한 농가에서 나온 한우의'도축검사증명서'에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로, 한우의 품질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신뢰 확보, 환경 보전이라는 3가지 목적 달성을 취지로 마련한 장치다. 인증 마크는 친환경축산물인증 획득 농가가 소를 팔거나 도축 출하 시 인증서 사본을 소와 함께 인계할 때에만 도축검사 증명서에 표시된다.

도축장에서도 도축검사 신청서에 친환경 인증 한우임을 표시해 검사관에게 넘기면 축산물검사관이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한우 명단을 일일이 확인한 뒤 도축검사증명서에 인증마크를 표기하게 된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도내 소 도축장인 나주축산물공판장 등 8개 도축장에 친환경축산물 인증 고무인을 제작해 공급을 완료했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소고기이력추적시스템과 친환경축산물 인증 체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는 믿고 살 수 있는 도내의 친환경 한우를 공급하고 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친환경 축산물 인증 농가는 모두 1천582가구로, 소는 1천217농가에서 10만여두를 사육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변호사 (재)개업인사
변호사 문형섭 올림